

기획

인권도시 광주 이렇게 만들자

다문화가정 인권 <13>



광주·전남지역 다문화가정이 1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가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 이주민의 가정폭력과 임신매매성 결혼 중개구조에 취약하게 노출된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는 국제 인권 감시 기구들의 지속적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결혼 이주민을 중심으로 각종 인권친화적 다문화 정책을 내놓고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분야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혼 이주민의 증가가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다문화정책을 내놓고 있고, 시민사회단체 등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결혼 이주여성의 친정방문과 함께 친정마을 의료봉사활동에 나선 다문화가정 지원 및 봉사단체인 (사)희망나무와 광주지역 의료인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자체의 올바른 다문화 정책이 이주자 인권보장 첫걸음

Guide Line 인권위, 지자체 다문화사업 안내서 <정책수립과 시행체계>

- 01 결혼이주자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지자체의 사업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다문화주의의 실현
- 차별의 철폐
- 인간개발
-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다양성 존중
- 개인의 자유 확대 및 보호

02 지자체의 다문화사업은 다음에 기반하고 이를 고려한다.
- 인권중심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적용한다.
- 비차별, 참여와 권한부여 및 책임귀속 원칙을 견지한다.
- 사업의 대상집단을 특정한다.

03 지자체는 사업의 기획, 시행 및 평가의 사업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이사업은 실제적인 현안과 필요에 기반하여 목표를 정하고 사업논리틀을 따라 기획한다.
- 사업은 사업논리틀에 따라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비교하고 대상집단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가정 폭력·해체도 증가
결혼 이주여성의 다문화 가정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가정 해체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12월 기준 1만2037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지만, 이혼 건수도 639건에 달했다.
◇인권 침해 문제 및 향후 개선방안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는 결혼중개업에 의한 인권침해, 체류와 국적취득과정에서의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는 취득요건과 관련된 차별적 조항, 국제결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 가부장적 가족문화갈등으로 인한 침해, 결혼이

이주자들 터전은 지역사회, 권리중심 접근 중요
비차별·참여 권한 부여·책임귀속 원칙 따라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주 결혼여성들에 대한 가정 폭력과 이에 따른 가정해체, 이혼의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배우자나 그 외 가족의 모욕과 폭언, 신체적 폭력, 정신적 학대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정 폭력과 가정해체는 배우자에게 중속적인 위치에 있는 결혼 이주민들의 체류 안정성에 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결혼 이주자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 침해 문제 및 향후 개선방안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는 결혼중개업에 의한 인권침해, 체류와 국적취득과정에서의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는 취득요건과 관련된 차별적 조항, 국제결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 가부장적 가족문화갈등으로 인한 침해, 결혼이주자의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서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입국 전 단계에 결혼 이주여성 사증발급장기화 및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부실관리 문제 개선, 사증 발급에 배우자의 신원보증요구제도 폐지, 결혼 과정에서의 여성의 상품화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결혼중개업 관리에 의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체류 단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 적용시 한국인 자녀의 양육여부에 따른 차별 시정, 혼인 파탄에 의한 귀책사유 입증책임은 결혼 이주여성에게 전가하는 출입국 정책 시정, 결혼 이주여성의 독립적인 체류권 보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귀화신청 및 강제 퇴거 단계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의존성 및 한국인 자녀의 양육여부에 따른 차별문제 시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 유예규정이 도입을 제기했다.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가족중심이 아닌, 이주여성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인권친화적 정책 추진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사업의 인권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있어서 인권이 고려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전파는 다문화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price, and features. Includes sections for '현대공인중개사', '가은 부동산', '대인동심일부동산', '첨단 신창동 신가동', '상무랜드공인중개사', and '토지매매'.